

분단과 전쟁으로 한쪽 날개 꺾인 한국여성운동: 보수 여성단체의 지배와 지연된 여성주의적 성의식*

김귀옥**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남한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두 축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성들이 한국전쟁 전후와 정전 이래로 어떻게 사라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우선 해방 전후 시기 진보 여성계와 보수 여성계의 성의식과 실천, 한 예로 공창제 폐지와 축첩제 금지를 둘러싼 여성계의 대응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분단정부 수립 후 반관반민화된 대한부인회와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들이 수행한 한국전쟁 전후의 역할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그들은 성평등 의식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채, 여성을 성 도구화하거나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성폭력의 주체로서 역할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와 여성계가 여성주의적 성의식과 성문화가 왜곡되거나 지연되었다. 즉 일제 강점기 반관반민화된 한국여성단체들은 천황제와 전시 성적 동원을 지지했다. 그러한 방식으로 분단 이래로 한국전쟁에서 반관반민화된 한국여성단체들은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역할과 함께, 전시 성폭력을 조력하면서 여성주의적 성의식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주제어: 한국전쟁, 반관반민 여성단체, 지연된 여성주의적 성의식, 대한부인회, 대한여자청년단

* 이 글은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부설 한국여성평화연구원이 공동주관한 학술토론회인 『전쟁의 허스토리과 경계의 여성들』(2023년 11월 3일)에서 발표한 원고를 여러 분들의 리뷰와 조언을 거쳐 재편집한 글이다. 특히 논문에 대해 상세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한성대학교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 freeox@hansung.ac.kr

I. 머리말

21세기 한국은 일제 강점과 해방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나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실제로 19, 20세기 제국주의 국가에 식민통치를 경험한 나라 가운데 경제 10위권에 진입한 예가 없다(이태진 2023)는 사실을 볼 때, 한국인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양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는 한국전쟁과 정전체제가 남긴 냉전문화와 상흔(김귀옥 2023)이 치유되지 못한 채 편만해 있다. 남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나(우리) 대 적의 정치학에 기반을 둔 냉전적 관계나 문화가 거시적인 부문이나 미시적인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분단정부가 수립되면서 남한내에 일제 식민 청산이 지금까지 미완으로 남아 있다. 또한 세계사적으로 유례없이 지속되는 70년의 정전체제로 인해 이산가족 문제, 민간인 학살이나 피해 문제, 전시성폭력 문제 등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나아가 정치적 민주화가 생활 민주화로 확산되지 못하고, 사회불평등 문제가 악화되면서 성불평등 문제도 고질적인 상태이다. 실제로 2023년 6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별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지수 0.680은 146개국 중 105위(2022년 99위), 교육(104위), 경제(114위)(World Economic Forum 2023)를 차지하여 성불평등을 수치로도 시사하고 있다.

또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래로 고착된 냉전문화는 한국의 정치이념이나 사회관계에도 크나큰 영향력을 끼쳤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나 문화, 시민사회에는 보수와 진보의 두 축을 기준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등장하는 게 일반 경향이지만, 한국의 냉전은 진보의 한 축을 거의 괴멸시켜 독재 권위주의 체제를 형성하여 이념적으로 우편향의 사회를 만들었다(손호철 1991). 시민사회 내 우편향적 보수주의 경향은 여성단체에도 영향을 미쳐, 분단정부 수립 이래로 우편향 여성단체가 주류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 스스로 좌파를 포함한 진보 계열의 여성들을 몰아내거나 여성 민중들에게 가학행위를 하기도 했다.¹⁾

1) 이 글에서는 우편향의 보수주의적 여성(단체, 운동)을 ‘보수 여성(단체, 운동)’, 좌편향이나 중도의 진보주의적 여성(단체, 운동)을 ‘진보 여성(단체, 운동)’으로 약칭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글에서 인용된 신문 기사를 포함한 사료의 맞춤법이 현재와 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에는 해방 초기에는 오히려 보수 여성운동과 진보 여성운동이 공존하기도 했고, 갈등하면서도 협력과 연대를 하기도 했다. 연대의 대표적 예가 1927년에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40개 지회와 총회원 2,870명을 갖춘 근우회(양동숙 2010, 16)의 활동이다. 1930년대 후반부터 해방 직전의 태평양전쟁기 일제에 의한 전시총동원체제에서 다수 보수 여성들이나 진보 여성들은 적극적인 친일부역의 길을 걸었다. 허정숙과 같은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는 해외로 망명하여 본격적인 항일투쟁을 했으나 대다수 여성 리더들은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에 적극 협조하였고 소수는 침묵하였다. 또한 해방 초기 잠깐이지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여성세력간에 연대의 시간이 있었다. 1945년 12월 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며 여성계는 서서히 균열되기 시작했으나, 그림에도 분단정부 수립 직전까지는 보수 또는 진보 여성들간에는 일정한 협력과 소통이 있었다. 그러나 분단정부 수립과 한국전쟁과 정전 이래로 남한에 사회주의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세력의 여성들도 사라졌듯이, 북한에도 일부 민족주의계열이나 김일성계열 외 사회주의계열의 여성들도 사라지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1980년대 이래로 민주화 과정에서 서서히 여성계에 일정 정도 진보 여성들이나 운동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사회주의계열의 여성 흐름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남한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두 축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성들이 한국전쟁 전후와 정전 이래로 어떻게 사라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고자 한다. 우선 해방 전후 시기 진보 여성계와 보수 여성계의 성의식과 실천, 한 예로 공창제 폐지와 축첩제 금지를 둘러싼 여성계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단정부 수립 후 반관반민화된 대한부인회와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들의 한국전쟁 전후의 역할과 성평등의식 부재 및 여성 스스로 성폭력의 주체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왜 한국 사회와 여성계에 여성주의적 성의식과 성문화가 지연되었는가를 발견해보고자 한다.

른 경우 원문을 살리기 위해 그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원문[현대식 표현]’ 식으로 부기함을 밝혀둔다.

II. 해방 전후 시기 여성계의 성의식과 실천

한반도 분단과 정전체제가 고착되는 과정에 외세의 냉전적 대결과 남북 정권의 군사적·이념적 대결에 의해 여성, 노동자, 농민, 노약자, 사회적 소수자 등을 포함한 민중의 숭한 피해가 있었다. 특히 적지 않은 여성들은 군·경, 반공청년들에 의한 전시성폭력이나 군‘위안부’를 포함한 국가폭력이나 인신매매 문제를 겪었으나 21세기 들어서까지도 수면 아래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묻혀 있고 기억마저 사라지고 있다. 2021년 발간된 김태우 교수의 『냉전의 마녀들』(김태우 2021) 연구결과물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김청강 2021)에도 불구하고 김태우의 연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한다. 한국전쟁 상황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민중에 대한 무차별적인 피해와 여성에 대한 수많은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여성단체인 민주여성동맹(약칭, 여맹)이 국제사회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시 전후로 이남지역에서는 좌우 양진영에 의해 가해진 전국적인 민간인 피학살사건이나 전시성폭력 사건이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 김성례(1998), 김귀옥(2004, 2012), 김상숙(2021, 2022) 등과 같은 몇 명의 연구자들이 제주4·3을 포함하여 전시 성폭력 문제를 고발하기 전까지 전시성폭력이나 인신매매문제는 안정효의 전쟁소설, 『은마는 오지 않는다』(1990) 등과 같이 픽션 형태로 재현되었을 뿐이다. 대신 사실적 차원에서 전시성폭력을 포함한 국가폭력으로서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는 여성단체는 분단과 한국전쟁 이래로 사라져,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침묵되었다. 2013년 미군‘위안부’에 대한 국가폭력 배상 기소 사건을 둘러싼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두레방,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이나 관련 여성단체들의 연대 활동은 국가에 의한 성폭력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쟁 이전 진보 계열과 보수 계열 여성단체들이 공존했던 미군정 치하에서 발생한 군인에 의한 성폭력 문제에 여성단체들은 어떤 태도였을까? 한 예로 1947년 1월 7일, 열차에서 벌어진 미군에 의한 여성 윤간 사건을 살펴보자.

지난 7일 목포발 서울행 호남열차에서는 미군 승객이 조선부녀 3인을 겁탈 운

간한 사건이 이어나 대전역에서 범인 4인이 미헌병에게 검거된 사실이 있는데 9일 군정장관대리 헬믹 대장은 범인에 대한 처벌방침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 처음으로 듯[듣]는 정보인데, 나 역시 미군인이고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다. 미국에서는 부녀자를 강간 검탈하는 자에게는 살인 강도죄나 똑같은 형벌을 하기로 되어 있다. 조사하여 사실이라면 살인강도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엄벌에 처하겠다.”(경향신문 편집국 1947a, 2)

그 사건과 같은 날,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에서 미군 5, 6인이 저지른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과 함께 그를 목격했던 민간인에게 미군이 총을 난사했던 사건도 지상에 보도되었다. 연달은 미군의 조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일반 사회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 여성단체인 조선부녀총동맹(약칭 부총, 1945년 8월 17일 결성. 1947년 2월 남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으로 개칭)은 “극형에 처하라”는 제목으로 미군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일에 대해서는 보내로(?), 용서할 수 없으며 조선민족과 1천5백만 부녀의 이름으로 미군최고사령관에게 항의하는 동시에 직접책임자를 극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모욕당한 부녀에게는 미국국법에 정한 배상을 지불해야 한다(경향신문 편집국 1947b, 2; 기사 원문 그대로 표기함).

부총 부위원장이었던 정칠성은 “조선 부녀에 대한 미군의 만행 사건에 대하여”라는 칼럼에서 당시 상황을 좀더 상세하게 묘사했다.

외국인을 싫어하는 긴 역사를 가진 조선 여성이 지금 초유의 무서운 소란기에 처해 있는 까닭이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미군인의 조선여성에 대한 강간, 윤간 사건에 우리 여성이 어찌 소름이 끼치지 않고 분노가 없을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 호남선 두 곳에서 벌어진 만행 사건을 어찌 우리가 용인할 것인가. 더욱이 우리의 분노를 격하게 만든 것은 남편 앞에서도 의복을 벗지 않는 우리 조선 여성을 수십 명의 외국인 앞에서 발가벗겨 놓고 총칼로 위협해가며 윤간을 한 야만적 행동이다. 그곳도 홀몸이 아니고 어린애를 업은 모성이었다(정칠성 1947[2020], 92).

정칠성의 칼럼에서 조선 여성이 외국인을 싫어하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과거의 외침(外侵)과 관련이 있다. 정칠성은 일제 강점기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 강제동원, 성매매 등에 의해 여성들의 비극을 초래했던 점을 문제시했고 같은 맥락에서 미군 성폭력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현했다. 또한 대표적인 보수 여성단체인 ‘독립촉성애국부인회’(약칭, 독촉애부)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 (1) 평화의 사절이요 여성을 존경한다는 미국인으로 조선여성을 능욕함은 민족적 모욕이다.
- (2) 정조를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조선여성은 미국인의 금후행동에 대하여 지대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 (3) 금반 이 미국인의 만행은 엄중처벌함으로서 우리 1천5백만 여성과 민족에게 사죄하는 동시에 후한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동아일보 편집국 1947, 2).

정부 수립 전, 진보와 보수 여성단체의 대표격인 부총과 독촉애부 두 단체의 성명문이나 정칠성의 칼럼의 기조를 보면 큰 틀에서는 미군 만행에 대한 인식 공유와 미국의 책임 추궁과 가부장적 성의식은 유사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의식의 차를 엿볼 수 있다. 부총의 성명내용이나 칼럼에는 가부장적 인식이 열게나마 배태되어 있지만 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외국군으로서 미군에 대한 분노와 같은 정서이고, 미군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 배상에 대한 명백한 요구이다. 반면 독촉애부의 성명내용에는 미국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태도로 시작하여 미군의 만행을 예외적 사건으로 표현하며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독촉애부의 주장에서 여성의 정조론을 기반으로 둔 가부장적 성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조를 지켜야 할 여성성이므로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며 처벌을 요구한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서 독촉애부 관계자들의 성의식을 엿볼 수 있다.

1. 전쟁 전 진보 여성단체와 보수 여성단체의 성의식

그렇다면 진보 여성단체인 부총과 보수 여성단체인 독촉애부를 잠시 개관해 보도록 한다. 1919년 3·1운동의 거대한 물결과 1차세계대전 종전과 국제연맹 설립에 대한 희망, 식민주의 국가들의 민족자결주의, 1917년 구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이 결합(동아일보 사설 1921, 1)되면서 식민지 조선에도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자결주의적 독립의 분위기 속에서 사회주의가 자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분위기는 여성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일제강점기 박원희, 정종명, 김필애, 정칠성, 주세죽, 허정숙 등과 같은 사회주의계열의 진보 여성들이 주도한 여성동우회를 들 수 있다. 여성동우회는 1924년 5월 10일 창립 총회에서 4명의 형사들의 감시를 받으며, “우리 조선의 무산녀성은 현재의 이중노예의 상태에서 버서나자”(조선일보 편집국 1924b, 3)를 제2강령으로 채택하면서 계급적 해방과 가부장적 노예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주장했다. 1925년 3월 8일에는 ‘국제부인데이(세계여성의 날)’에 맞춰 일본 도쿄에서 여성 유학생 중심으로 ‘삼월회’가 조직되었다. 1926년 12월 29일 ‘전조선여성’을 위한 활동으로 전환하기로 결의하면서 한국에서 ‘여자청년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해체식을 가졌다(동아일보 편집국 1927, 3). 대표적인 여성 유학생인 이현경, 황신덕, 정칠성(1926, 7), 박경희 등이 활동했고, 그들은 근우회를 낳는 산파역을 했다.

다음으로, 1927년 5월 23일 좌우합작으로 출발한 근우회는 다음과 같은 7대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1. 여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인 일체 차별철폐
2. 일체 봉건적인 인습과 미신 타파
3. 조혼(早婚) 폐지 및 결혼의 자유
4. 인신매매 및 공창(公娼) 폐지
5.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옹호
6. 부인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産前)·산후(産後) 임금 지불
7. 부인 및 소년공(少年工)의 위험 노동 및 야근 폐지(동아일보 편집국 1929, 3).

근우회는 삼월회, 여성동우회 멤버들의 주도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설립되고 있었던 ‘여자청년회’를 근간으로 하여 전국적 조직으로 출발했다. 근우회 기관지인 『근우』 창간호(1929년 5월, 편집 및 발행인 정칠성) ‘근우회 회황일람’에는 부산지회로부터 목포지회, 해외지부로 동경지회와 경도지회 대략 40개 지회가 설립되었고, 회원 수는 2천9백71명(조사부, 82-93)이었고 1930년에는 지회 60개, 회원수 6천여명에 이르렀다(강

영심).

1931년 근우회가 해체된 후 뒤이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일제의 전시동원체제기에 진보 여성단체의 흐름은 단절되었다.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일제 황민화정책에 협력했고,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조선부인문제연구회’, ‘애국금차회’, ‘전위여성격려대’, ‘조선여자청년연성소’ 등과 같은 조선총독부 관변 여성단체는 군사후원활동으로서의 모성을 강조하는 여성의 활동과 자식을 천황의 신민으로 바치도록 하는 것, 살림살이 긴축을 통해 보국하고 전쟁 물자를 만들어 일본의 승리를 만들어 내자고 주장했다. 1937년 이후 그러한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김활란,²⁾ 고헌경, 유각경, 박마리아, 박인덕, 이숙중, 송금선, 서금선, 손메리, 모운숙 등을 들 수 있다(양동숙 2010a, 22-24). 한때는 진보 여성단체나 기독교계통 여성단체의 여성 리더들이 소위 부일협력자가 되어, 일반 여성들이 전시총동원체제에 동원되고 일본군·위안부로 끌려나가 전시성폭력을 당해도 저항은커녕 ‘애국’이라는 말로 영광으로 여기라 강변했다.

미국과 구 소련의 대일본 전쟁에서의 승리로 식민 조선은 해방되었으나 38도선 분단으로 이어졌다. 해방 직후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우후죽순 결성되었다. 여성단체로 좌우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부총과 독촉애부의 주요 간부들 중에서는 근우회 출신이 많았다. 유영준, 정칠성 등은 이후 부총의 주요 활동가로, 유각경, 황애덕, 김활란, 황신덕, 김영순 등은 독촉애부를 비롯한 우익 여성단체들을 결성하는 역할을 했다.

해방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여성단체는 조선부녀총동맹(약칭, 부총)이었다. 부총은 1945년 8월 15일 결성된 좌우연합체인 ‘건국부녀동맹’(위원장 유영준, 부위원장 박순천)에서 주로 진보 여성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1945

2) 김활란은 회고록에서 “1944년 여름, 나는 그들에게 끌려서 징병유세를 다녀야 했다. (...)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과 그보다 더 기세 등등한 감시와 강요하에 나는 살이 떨리고 양심이 질식할 징병 유세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 “남의 귀한 아들들을 죽는 길에 나가라고 권했으니 장님 되어도 역을 할 것 없지.”라고 말하며 학교가 폐문당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징병 권유를 했다고 변명을 했다(김활란 1965[1999], 174-176). 그런데 1941년 12월의 강연회에서 “여성의 무장”이라는 주제로 “황국신민된 고마움에도는 감읍할” 뿐이며, “성전(聖戰), 도의와 동양인류해방을 위한 싸움”에 “우리들의 생활의 전부를 바쳐서 如何한 고통이든지 달게받으며 나아가려는 영구적인 根氣있는 봉공”정신으로 분투하자고 역설했던 김활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김활란 1942, 96-97).

년 12월, 150개 지부와 약 180만명의 성원을 갖는 조직으로 결성되었다. 부총 집행위원장 유영준, 부회장 정철성·허하백 등이 선출되었고 간부에는 인텔리 여성이 많았지만, 기생, 여성노동자 출신이 적지 않았고, 일반 성원의 대다수는 농민여성이었다(양동숙 2010a, 42-44). 부총의 행동강령을 보자.

1. 정치적으로 남녀평등의 선거권, 피선거권의 확립,
2. 친일파, 민족반역자 국수주의자를 제외한 민족통전 결성의 적극참여,
3.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4. 여성의 경제적 평등권과 자주성 확립,
5. 남녀임금 차별제 철폐,
6. 8시간 노동제,
7. 근로부인의 산전산후 각 1개월간의 유급 휴양제 확립,
8. 사회시설(탁아소, 산원, 공동식당, 이동공원)의 완비,
9. 공사창제와 인신매매철폐,
10. 일부일처제 확립,
11. 교육에 대한 남녀 차별 철폐,
12. 국가부담에 의한 부녀문맹 퇴치기관 설립,
13. 생활개선,
14. 모자보호법 제정,
15. 봉건적 결혼제 철폐,
16. 농촌에 국가부담의 의료기관 설치(민주주의민족전선 1946[1988], 180-181)

부총은 선거권을 포함한 기본권의 성평등, 경제활동의 성평등, 모성보호제도 등과 함께 봉건적 결혼제 철폐 및 공사창제와 인신매매철폐 등을 행동강령으로 담았다. 1930년대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사회주의 계열의 진보적 여성운동이나 활동이 표면적으로 사라졌지만, 해방 직후 분단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맹렬한 기세로 활동하였다. 특히 해방 직후 1년간은 친일부역자 및 식민잔재 청산운동과 함께 대중적 차원에서 세를 얻었다. 그러나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회의가 결렬되고, 미국에 의해 조선문제를 유엔에 이관하게 됨으로써 임시정부 수립의 기회를 잃게 되고, 남한은 미군정과 친일세력들과의 협력에 의해 반공주의적 분위기가 강화되면서 진보 여성단체들은 대중적 위상을 잃어갔다. 또한 분단정부 수립이 목전에 임박하게 되자 부총의 후신인 ‘남조선민주여성동맹(약칭, 여맹)’의 주요 임원들은 월북했고,

일부 여맹원들은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49년 10월 18일 공보처는 군정법령 제55호 ‘정당에 관한 규칙’(1946년 2월 23일 제정, 2월 24일 시행)에 입각하여 등록된 정당 및 사회단체 130여개를 “공산주의와 그 5열단체”로 규정하며 등록취소를 발표했다. 그중 하나에 부총의 후신인 여맹도 포함되었다(경향신문 편집국 1949, 1). 다시 말해 분단정부 수립 이후에는 사실상 남한에서 진보 여성단체가 괴멸되었고, 진보 여성들도 월북하거나 전향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남한에서는 민중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단체도 사실상 오랫동안 없어지고 말았다.

다음으로 1946년 6월 18일 발족한 ‘독립촉성애국부인회’(약칭, 독촉애부)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독촉애부 역시 부총과 마찬가지로 해방 초기 결성된 건국부녀동맹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보수 여성들이 만든 여러 단체들로 결성되었다. 즉 ‘한국애국부인회’(1945년 9월 10일 결성)와 ‘독립촉성중앙부인단’(1946년 1월 10일 결성) 등이 규합되어 독촉애부가 발족했다. 독촉애부 제1회 전국대회(1946년 6월 18~20일)의 결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좌우와 남북이 통일된 자유정부수립에 우리 여성은 피로써 맹세하고 적극 협력하려한다.
2. 일천오백만 우리 여성은 총 단결하여 국산품을 애용하고 생산에 적극 협력함으로 조국경제건설에 공헌하고자 한다.
3. 근로 질서 간편 청소의 신생활을 전개하여 건설국민의 문화향상을 도모하려 한다(동아일보 편집국 1946a, 2).

독촉애부 위원장 박승호, 부위원장 황기성·박순천을 포함하여 성원 21만 8천여 명으로 출발하여 1947년 1월이 되면 성원 3백 30여만 명으로 급증했으나 미국측 자료에 따르면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 독촉애부 간부의 대다수는 인텔리 여성으로서 일본이나 미국 유학생 출신이 많았고, 기독교 신자도 많고, 그들의 배우자 역시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많았다(양동숙 2010b, 383-392).

이어 1946년 11월 15일에는 보수 여성단체의 연합체인 전국여성단체총연맹(약칭, 여총; 회장 황애덕, 부회장 황기성, 총무부장 신의경, 박현숙, 문선호)이 결성되었다. 여총에는 조선여자국민당, 불교여성총연맹, 카톨릭녀자청

년연합회, 여자기독교청년회, 독립촉성애국부인회, 독립촉성여자청년단, 천도교내수회,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산하) 부녀국 등 8개 여성단체가 포함되었다.³⁾ 강령에는 세계여성과 제휴하여 인류평화에 공헌할 것을 밝혔고 결의문에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동아일보 편집국 1946c, 2). 앞에서 본 독촉애부로부터 전국여성단체총연맹에 이르기까지 성평등과 여성해방주의적 관점과 주장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다. 1959년에는 전국여성단체총연맹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초대회장 김활란)로 계승되며, 독촉애부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대한부인회, 활동대로서의 대한여자청년단, 대한어머니회 등 8개 회원단체가 가입되어 출발했다.

해방 당시 진보 여성단체나 보수 여성단체 모두 그 뿌리가 근우회에 두어졌다는게 일반 인식이다. 그러나 앞의 근우회 행동강령을 보면 주 내용이 부총에는 계승되었으나, 독촉애부를 비롯한 보수 여성단체의 강령에는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다소 애매한 표현이 있을 뿐 제1회 전국대회의 결의문에서는 성평등적 인식이나 여성해방주의적 강령, 인신매매와 성매매 관련한 강령 내용 등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보수 여성단체들은 미군정시기때부터 반관반민적 길을 갔다. 고향경을 비롯한 여성 엘리트 활동가들은 미군정 보건후생부가 부녀국을 만들었을 때 참여하여 고향경은 초대국장이 되었다. 군정청 법령 제107호로 부녀국의 기능과 직무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여성원호의 총본영 군정청내에 부녀국설치

조선에 있어서 부녀자의 사회경제정지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완전하고 동등한 민주주의 기쁨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정청에서는 법령 제107호로써 보건후생부의 일 부로 부녀국을 설치했다. (...) 그 기능과 직무는 (...)

1. 부녀노동상태개량
2. 직업여성에 대한 승진기회의 촉진
3. 상공농업 교육기예교수와 가정에 있어서의 부녀에 대한 후생사업

3) 1946년 8개 우익 여성단체를 기반으로 여충이 출범된 이후에 여자기독교절제회(홍에스터), 애린여자선교단(최순철), 흥국부녀회(김선), 낭랑구락부(모운숙), 우리부녀신생활(이항진), 대한여자청년단(모운숙), 이북여성동지회(박현숙), 대한간호협회(김은순), 대한조산협회(임영숙), 여성문제연구원(황신덕), 전재부인상조회(전선애), 민족구호단(단장 조무상각(趙無上覺)), 직업여성클럽(함진옥) 등이 가입했다(양동숙 2010, 84-85).

4. 부녀의 관청직원으로서의 활동
5. 부녀의 건강, 태아의 분만에 대한 주의
6. 부인참정권
7. 유곽관리와 첼페
8. 부녀범죄와 그 범죄자 수용소 제도에 대한 주의
9. 부녀와 아동 여객에 대한 보호 (…)(조선일보 편집국 1946a, 2)

초대국장이었던 고헌경은 미국 미시건주립대학의 사회학박사(1937)로서 귀국 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재직 당시 수많은 친일 반민족행위를 했다. 일제의 전비 모금 단체인 ‘애국금차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간사를 맡았고, 조선부인문제연구회 주최 순회강연회에서 내선일체를 강조하고, 임전대책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하면서 부인대 지도위원으로 참여했다(민족문제연구소 2009). 조선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징병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수차례 기고했던 개인사를 가지고 있다. 해방 후 미군정의 보건후생부 부녀국은 공창제 폐지활동을 하면서 부총을 포함하여 진보 여성단체를 탄압하는 데에도 협력하는 양상을 띠었다.

이제 두 계열 여성단체의 성의식을 공창제 폐지문제와 축첩제 금지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공창제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대응

공창제는 일제 강점기인 1916년 식민지 조선에 실시(강정숙 1998, 224-227)되어 1948년 미군정의 공창제폐지정책에 따라 폐지령이 만들어졌다. 식민지조선의 일제강점기 공창제 폐지 담론은 일본의 공창제 폐지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일제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일본 영역내에서 성매매 관리제도로써 국가에 의해 합법화 또는 묵인했으며, 창기 등록제도를 실시하여 강제 성병 검진제도를 실시한 시스템이 공창제였다. 공창제 실시 과정에 가난한 어린 여아를 포함한 여성들의 인신매매문제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거나 극빈한 여성들이 성매매업으로 흘러들어가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었다(동아일보 편집국 1921, 4; 노지승 2016). 1920년대 여러 신문 지상에 술집에 팔려가는 여성 인신매매 문제가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 1924년 창립된 조선여성동우회⁴⁾(남화숙 1999)에 이어 1927

년 근우회 강령의 하나로서 인신매매문제와 공창제 폐지 강령이 등장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 건국부녀동맹의 행동강령 제5에 “공사창제(公私娼制) 및 인신매매 철폐”가 포함된 이래로 부총을 비롯한 대다수 여성운동단체는 폐창을 지지했다. 보수적 여성 정당인 조선여자국민당 당수 임영신은 공창폐지를 지지하면서 공창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여성의 자각 부족’에 기인한다는 입장을 취하며 “마굴과 같은 인육시장으로 여성이 나오지 않게, 나올 수 없게 사회의 힘으로 방지 선도”(동아일보 편집국 1946, 2)를 주장했다. 당대 일반시민사회에서는 공창제 폐지/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9월에 조선일보사가 개최한 좌담회에서는 공창제를 둘러싸고 공창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공창제존치는 “사회악”

존속영론배에 양심이 있는가?

공창제도폐지

폐창구제좌담

(...) 이승호씨(전국사회사업연맹)=이 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먼저 창기들이 유곽에 드러오게 된 원인과 현재 일부 반대하는 사람의 반대 이유를 잘 고찰한 후 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드러오게 된 이유는 대체 생활고, 유혹, 본인의 음탕성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공창제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폐업 후 생활이 곤란할 것이라는 것과 성병이 퍼지는 것과 **공창을 폐지하면 사창이 늘**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편집국 1946b, 2; 진한 글씨는 글쓴이 주).

해방 당시 공창 폐지 반대론의 주장은 공창의 사창화, 성병(화류병)의蔓延 등에 기초를 두었다. 공창 발생 원인으로 공창 자신의 화장이나 값비싼 음식을 즐기는 등과 같은 사치한 생활과 성적 문란함으로 귀결짓는 여론(현동림 1947, 3)으로서 공창 책임론, 즉 사회 책임 방지론을 주류화하는 태도가 조성되고 있었다.

-
- 4) 조선여성동우회는 1924년 5월 4일 발기총회를 개최하였고, 발기인으로는 박원희, 정종오, 김필애, 정칠성, 김현제, 홍순경, 오수덕, 고원섭, 우봉운, 지정신, 주세죽, 김성삼, 허정숙, 이준수 등이 참여(동아일보 편집국 1924, 3)했다. 그들의 회합 중에는 종로경찰서 경관이 입장하여 분위기가 엄중경계했다(조선일보 편집국 1924a, 3)고 한다.

건국부녀동맹이나 부총 외에 보수 여성단체들은 처음에는 공창문제에 소극적이었으나, 임영신의 여자국민당이나 독촉애부, 대한부인회, 한민당부인회, 종교단체의 여성청년회 등이 공창폐지에 합류하게 되었다. 공창제 폐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창 출신의 여성들이 반드시 자립할 수 있는 조건과 재활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1946년 6월 14일 ‘전국폐업공창구제연맹(全國廢業公娼救濟聯盟, 약칭 전국폐창연맹)’이 결성되었다.

시내 14부인단체서 총결기

사람만은 해방하였으나 유곽은 그대로 남아[아]있고 농중(?)을 나온 창여(娼女)들이 갈곳이 없어 다시 유곽의 시장으로 도라가[돌아가] 지난 7월 한달 동안에 120명의 창여가 새로 느른[는] 사실에 비치위[비쳐] 이대로 있으면 여전이 공창은 존속될 것이니 이 소굴을 없새[애]도록 먼저 장여갱생 운동을 꺼르키여야 [일으켜야] 하겟다고 시내 14부인단체(여자국민당, 애국부인동맹, 불교부인회, 천도교부인회, 한국독립촉성애국부인회, 부녀총동맹, 여자기독교청년회, 여자국풍회, 한민당부인회, 여자청년단, 천주교여자청년회, 성병예방협회)가 결귀[의]해야 10일 상오 11시 시내대화정 해동역경원에서 폐업공창구제연맹을 성대히 결성하였다.

대회는 독립로동당부인회장 김말봉씨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고, 동당 유럽씨의 축사가 있는 다음 김말봉 씨를 위원장으로 선거 각단체에서 5명을 선출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결정하고 토의 사항에 드러가 별항과 같은 구체사업을 결정하고 또 이 사업이 일지도 빨리 진전되기를 위하여 사업내용을 하지 중장, 러취 장관에게 설명 진정하기로 결의하고 하오 3시 지나 폐회하였다(동아일보 편집국 1946b, 2).

전국폐창연맹은 공창제 폐지와 함께 그들이 다시는 성매매로 회귀되지 않도록 구제대책으로서 “희망원(가칭)을 국가가 설치”하고 그들을 “정신적·경제적으로 갱생”시키고, “의료기관과 계몽시설을 따로 두어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조선일보 편집국 1947, 3) 등을 요구했다.

그러한 영향에 따라 미군정청 보건후생부 산하 부녀국은 직무의 하나로 “유곽관리와 철폐”를 꼽았다. 그 결과 1947년 8월 8일 ‘공창제도폐지령’이 통과되어 남조선과도정부 제7호 ‘공창제도등폐지령’이 제정되었고 1948년 2월 14일자로 시행되었다. 시행되던 날 공창폐지대책여성위원회(회장 김말봉)

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늘(14일)부터 이 땅의 공창들은 기나긴 원한의 소굴인 유곽에서 자유와 갱생의 푸른하늘 아래로 해방이 된다. 불운한 여성 그대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아직 표정 속에 치기도 가지지 않은 열철팔세부터 이리처럼 짓궂은 못사나이들의 발뿌리로 무참하게 짓밟히었느냐? 가난한 죄, 압박받는 민족의 딸로 태어난 죄, 그대들은 오직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대들 자신은 도모지 책임을 질 수 없는 이 한가지 때문에 인생의 첫걸음에서 희망은 산산히 깨어지고 허구한 날을 목이 맺히는 비통한 절규 속에 청춘이 시들든 것이다. 가엾은 조선의 누이들…… (….) 공창폐지연맹위원장 김말봉 씨 등 10여명의 각 여성단체대표들이 모여 공창폐지 후에 오는 만약의 경우를 염려하여 가장 진실한 의견을 토로하였으며 일당에 모인 여성들만은 공, 사적으로 2천여명 창기들의 교화뿐만 아니라 친딸로서 그들을 인도하려는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경향신문 편집국 1948a, 2).

공창폐지대책연맹과 같은 연대조직의 동정과 구휼 정신이 담긴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행된 ‘공창제도폐지령’에는 공창제 폐지가 성공하게 될 조건은 부재했다. 폐지령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본 영은 일정 아래의 악습을 배제하고 인도를 창명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의 민주주의적 견지에서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매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1916년 3월 경무총감부령 제4호(遊廓業娼妓取締規則)는 차此를 폐지함. 종래 동 영에 의하여 취득한 유곽(貸座敷)영업, 창기가업의 허가 급及 유곽영업자조합 설치의 인가는 자茲에 그 효력이 상실됨.

제3조 좌의 각 호의 1에 해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만 원 이하의 벌금 우또는 우양자右兩者를 병과함.

가. 본 영에 의하여 폐지된 제도의 업무를 계속하며 우또는 경영하는 자나. 매춘의 행위를 하며 우또는 그 매개, 장소 제공을 한 자

다. 전호 전단의 자를 상대로 한 자

라. 타인에게 성병을 전염시킨[시킨] 자(법제처 1947).

5) 이 폐지령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해 1961년 11월 9일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위의 폐지령은 ‘유곽(성매매)업’ 경영자나 ‘창기’(성매매노동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을 뿐이다. 전국폐창연맹이 제시한 탈매춘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보장이나 재취업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나 교육 등을 비롯하여 조치들은 묵과된 채, 매춘시 벌금부과 조치를 취했을 뿐이다. 서울시 후생국장도 “적극적인 대책이 별로 없”고 “전락하지 않도록 1주일에 1, 2회 명사 강의로 교화지도할 방침”이라는 의견을 시사했다. 같은 지면의 ‘창부’ 출신 이미향은 “빛 때문에 큰일났습니다. 누구나다 최소 1, 2만원의 빛은 지고 있어요. 우리들을 나쁜녀이라고들 합시다만 누가 자원해서 이런곳에 왔겠습니까? 앞으로 지낼일이 야단입니다”(경향신문 편집국 1948b, 2). 실제로 그 폐지령은 사창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 되었다.

3. 축첩제 금지를 둘러싼 우익여성단체의 성의식

여성들이 공창폐지 못지않게 중시했던 문제가 축첩제폐지 문제였다. 부총 또는 여맹을 비롯한 진보 여성단체도 축첩 철폐를 포함한 봉건적 결혼제(민머느리제 포함) 철폐를 제기했다. 진보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인권 관련한 주장 중의 하나이지만, 보수 여성단체에서는 선거권이나 경제권에서의 성평등권을 중심으로 언급해왔음을 볼 때 축첩 폐지 문제를 둘러싼 온도 차이가 있다.

1920년대 초반부터 축첩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제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가족법을 조선에 적용하여 근대가족의 형태로서 1부1처제를 기반으로 한 가족의 기본 형태를 토대로 1930년대 중반에 축첩제 금지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축첩은 근절되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해방 후까지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해방 후 공사창 폐지와 인신매매반대운동과 함께 1부1처제 정착과 축첩제를 청산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47년 1월 3일, 여총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다음과 같이 축첩 문제를 입법화하도록 건의를 했다.

4. 친일파, 민족반역자모리배와 한가지로 가정을 파괴, 건국의 기둥을 쏙먹는 창기를 농락하고 축첩하는 자는 원중(員中, 과도입법의원을 의미)에서 제거할 것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교육계 정당원 각계지도층에서 축출시킬 것을 바랍.

5. 건국도상에 방해자인 모리배, 악질 음모자, 향락도 등의 소굴인 요정과 창기를 폐지하고 속히 신성한 사교법규를 제정 발표하여 주기를 갈망함. 단기 4280(서기1947)년 1월 3일, 전국여성단체총연맹(동아일보 편집국 1947a, 3).

위의 입법 요구에 따르면 1947년 1월 당시 남조선과도입법의원과 같은 최상층 정치엘리트나 행정계, 교육계 인사들 중에도 축첩자들이 진출해 있었다. 축첩문제에 대해 진보와 보수 여성들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민법상 1부1처제가 법제화되었음에도 일제강점기로부터 미군정기에도 축첩제는 온존되어 있었다. 부유층이나 권력자층은 공창이나 사창제를 즐기는 것이나 축첩을 자랑스러운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 문화로 여기기도 했다(박순천 2015, 127). 1949년 국회에 축첩생활자를 공무원 임용자격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공무원법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 절대 다수였던 남성 국회의원들은 “졸지에 이 법을 실시하면 이혼과 가정파탄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법 제정치 말고 교회, 사회, 학교교육, 신생활운동에 맥길 것이니 법위신을 지키기 위하여도 제안자는 취하하기를 요청”한다는 식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여 결국 부결되고 말았다(경향신문 편집국 1949a, 2). 회장 박순천이 이끄는 대한부인회를 포함한 보수 여성단체들의 대대적인 축첩추방운동 결과 이승만은 입법 추진의지를 표명하며 축첩금지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최정순 2015, 129). 축첩제 금지의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보수 여성계는 축첩자에 대한 투표 거부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고, 박순천이 주장했던 간통쌍벌죄 입법화 운동을 한국전쟁 중에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이혜숙·강인순 2015, 112).

여기에서 한 가지 살펴볼 문제는 축첩제 금지와 관련된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축첩문제를 사회적 차원이나 가족관계로 보면 마땅히 없어야했던 문제이지만,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본 부인과 첩 모두 피해의 문제이다. 또한 대다수 첩의 경우 빈곤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그 문제는 공창제 폐지에 따른 여성의 자활 대책 문제와도 비슷한 맥락의 문제가 놓여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공창을 포함한 성매매 종사 여성이나 축첩제의 피해여성에 대한 사회적 포용 능력은 대단히 협소했다. 전통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강점기에도 재가하는 여자나 첩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여성조차도 부정적 인식, 즉 ‘음란부정한 여자’(동아일보 편집국 1932, 5) 또는 ‘행실

나쁜 여성'이자 정절을 더럽힌 여성으로 낙인이 찍혔을 뿐이다. 분단정부 수립과 전쟁 이후 진보 여성의 괴멸 이후, 성폭력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 또는 성문제와 계급문제를 연관적으로 인식(정칠성 1947[2020])했던 정칠성 같은 여성은 사라졌다.

이제 남한 정부 수립 과정에서 보수 여성단체는 반공에 기반을 둔 반관반민의 국가 단체가 되었고, 일부 여성들은 국가 페미니스트로 역할을 하며, 자유주의적 여성계로서 세력화되었다. 그런 사이에 남북분단이 고착되면서 진보 여성단체들은 대개 사라지고, 여성운동가들도 일부 월북을 하거나 보도연맹원이나 우익으로 전향⁶⁾하거나 학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총 간부였던 유영준이나 정칠성, 이순금 등 대다수 간부들이 월북을 했다면, 고명자⁷⁾ 등은 전쟁 직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경향신문 편집국 1950, 2)되어 한국전쟁 당시 사망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Ⅲ. 반관반민 여성운동: 대한부인회와 대한여자청년단

분단과정에서 남한의 보수 여성단체들은 미국과 이승만 정치노선과 유엔 감시의 총선거를 적극 지지했다. 그러한 보수 여성들은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부하에서 적극적으로 반관반민 노선을 실천해 나갔다. 이는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황민신민화 목적으로 추진된 '관민융화' 노선을 모운숙, 김활란 등의 여성인사들이 적극 실천하며 일반 여성들을 전쟁으로 동원해나갔던 것과 유사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수 여성단체가 지배집단화되어가는 과정을 살펴 보도록 한다.

6) 1949년 12월 국민보도연맹 중앙본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위 '전향자' 총수는 5만천82명이라 하고 그중 서울지역 여성동맹원 150명도 포함되어 있다(조선일보 편집국 1949, 2). 전체적인 국민보도연맹원 통계는 말할 것도 없고 성별 통계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여성동맹원 외에도 여성들이 여러 단체나 부문에 적지 않게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7) 조선희는 장편소설, 『세 여자』(1, 2)에서 허정숙, 주세죽과 함께 1920년대 여성 사회주의 트로이카로 불렸던 고명자, 세 명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조선희 2017).

1. 반관반민화된 남한 여성운동

1946년 9월 16일 미군정법령 제107호에 의해 보건후생부 산하에 설치된 부녀국에는 미국 박사 출신의 고향경이 초대국장을 맡으며 군정과 우익 여성 단체를 이어나가며 관민협조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미군정청 경무부 산하 여자경찰제도⁸⁾도 관민협조에서 진보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활동을 감시 및 탄압하면서 괴멸시키는 데도 일익을 담당했다(경향신문 특별취재반 1977a, 5).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임영신 여자국민당 당수는 초대 상공부장관에 임명되었고, 초대부녀국장이었던 고향경의 언니 고봉경은 경무부 여자경찰과 초대과장, 대한부인회 회장 박순천과 대한여자국민당과 대한부인회를 거친 박현숙은 감찰위원, 독촉대부 초대 위원장 박성호는 사회부 부녀국장, 대한여자국민당(당수 임영신)의 황현숙은 여자경찰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정부와의 유착관계는 더욱 긴밀해졌고, 그들 스스로 진보 여성들이나 여성단체를 괴멸시키는 데 한 역할을 했다(양동숙 2010c, 1148).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승만 대통령은 미약한 정치 기반을 만회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단체들을 동원하여 입맛에 맞는 단체들을 반관반민화하여 한민당 주도의 입법부를 장악하려 했다(하유식 1997, 206). 형식적으로는 독촉국민회 같은 단체가 이승만에게 국민운동의 차원에서 관민합작운영위원회를 건의(조선일보 편집국 1948, 1)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1948년 제주 4·3과 10월 여순사건을 전후하여 관민합작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1948년 12월 이승만은 ‘관민합작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전국적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발표하게 되었다(동아일보 편집국 1948, 1). 1949년 9월, 이승만은 ‘반공사상 전개, 반공국민 조직, 반공사회 실천’을 위한 국민운동을 해나가기 위해 관민합작으로 ‘군경, 지방관리’와 모든 민간인 조직들이 ‘세포조직’이 되어 국가의 지시하에 반공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조선일보 편집국 1949a, 1)하기도 했다. 이승만을 구심점으로 한 반관반민단체로

8) 1946년 봄, 군정은 여자경찰관제도를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좌익계통 여성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목적으로 한국애국부인회, 독립촉성애국부인회 등 우익여성 추천에 의해 사실상 인맥을 통해 특채로 여자경찰을 선발했다(경향신문 특별취재반 1977a, 1). 1기생 60명은 1946년 8월 서울 등 주요 도시에 배치받아, 좌익진영의 벽보 뜯기부터 월남피난민 민생 구호활동, 좌익 여성 감시, 사찰 등을 했다고 한다(경향신문 특별취재반 1977b, 5). 또한 1947년 5월에는 4개 여자경찰서가 발족되었고, 경무부 여경과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경향신문 특별취재반 1977c, 5).

서 대한국민회(약칭 국민회, 1949년 2월 창립), 대한여성회, 대한청년단 등이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관반민단체는 다른 말로는 관민단체, 또는 어용단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치 행위를 지지하는 비국가기구라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시절 1896년 창립된 독립협회도 관민 통합적 성격(권기하 2020)이 강했으나 이승만 정부 하에서 생긴 반관반민단체는 일제강점기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민일체의 대조직

군사원호연맹 결성

총후의 적성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총독부가 중심으로 군관민이 일치하여 대규모의 군사후원단체를 조직키로 되어 이, 삼일 중에 각 단체 대표자가 모히여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기로 되었다. 새로 생기는 단체의 이름은 ‘조선군사원호연맹’이리고 일커서 고문에는 南(次郎(みなみじろう)의 성(南)총독, 小磯(国昭(こいそ-くにあき))의 성[小磯] 군사령관 상담역 (…), 애국부인조선본부⁹⁾ (…), 삼십여단체로 목적은 황군원호에 서로 협력하여 군인의 의기를 고취격려하여 군인으로 하여금 가정을 돌보는 근심이 업도록 하자는 것으로 그 외 활동에 자못 주목된다(조선일보 편집국 1937, 3).

특히 중일전쟁 이후 여성단체를 포함한 대다수 사회단체들은 조선총독부의 어용단체(강만길 2020)로 비하되었다. 이승만은 여당조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반탁운동과 반공운동을 주도했던 사회단체들을 자기편으로 동원해 나갔다. 이승만은 자신 주도의 통일이라는 기치를 들고 친일파들에게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 이승만 중심으로 관민일체해 나갔다.

9) ‘애국부인(회)조선본부’는 전국적 조직으로 조선총독부의 간부 부인들과 조선인 귀족부인들이 주도하여 1911년부터 1941년까지 존립하여 일제의 군사원호를 주 목적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중일전쟁 이후 본격적인 태평양전쟁기에는 조선총독부의 전시체제하의 여성노동력 동원을 보조하기 위해 이숙중, 송금선, 김활란, 고향경 등의 활약한 ‘조선부인문제연구회’, 귀족부인들과 고향경, 김활란, 유각경 등과 같은 지도층 여성들로 구성된 ‘애국금차회’, 이숙중, 황신덕, 송금선, 김활란, 모운숙, 허하백 등이 청년들의 징병 및 전시 동원을 부추기는 강연회 활동을 했던 ‘전위여성격려대’ 등과 같은 관민협력단체들이 있었다(양동숙 2010, 22-23). 큰 틀에서 보면 이들 단체는 전범적 성격을 띠고 있다.

2. 반관반민 여성운동을 이끈 대한부녀회와 대한여자청년단

이승만 정부의 관민화 추진에 남한 여성운동계에서 주도권을 잡은 사람 중 한 사람이 박순천이다. 1949년 2월, 박순천의 주창하에 효과적인 단독정부 추진을 위하여 독립촉성애국부인회가 대한부인회로 확대개편하게 되었다. 이승만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총재로, 부총재에는 조신성과 황애덕, 회장에는 박순천, 부회장에는 유각경과 오인실이 선임되었다. 박순천은 독촉애부의 기관지로 출발하여 대한부인회 기관지로 확대 발간된 『부인신보』¹⁰⁾의 창간을 주도했다(조영숙 2021, 58). 박순천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한부인회가 반관반민 조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반관반민의 형태를 취하고자 한 까닭은 일제강점기에 그토록 꿈꾸던 독립 쟁취의 완성으로서의 독립국가의 수립을 위해 여성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과, 전국적 여성조직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한 것이었으며, 이는 여성계몽을 통해 여성의 삶의 틀을 바꾸려는 변혁적 시도의 확대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관반민은 정권의 시녀가 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최중순 2015, 105; 진한 글씨는 글쓴이 주)

박순천은 대한부인회가 반관반민단체로 될 때 정부에서 여성의 지위가 있고, 여성계몽활동을 통해 여성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관반민 단체들의 재정이 이승만 정부에서 지원된다는 점에서 단체들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부에 강력히 밀착되었다(하유식 1997, 217). 박순천의 주장인 “반관반민은 정권의 시녀가 될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일제강점기에 한국 여성단체들이 관민융화 정신으로 총독부의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전시총동원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했던 것을 박순천이 모를 수 없었을 것이다. 관민일체의 기치를 들었던 김활란, 모윤숙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태평양전쟁기에 남녀 청년들에게 전쟁터로 나가는 것은 황국신민된 고마움

10) 『부인신보』는 1947년 5월 3일 독촉애부 기관지로 발간되었으나, 1950년 5월 4일자 『부인신문』에 본보 창간 3주년 관련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두 신문 발행인이 박순천이기도 하지만, 부인신문이 부인신보를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으로 1950년 중단되었다.

이자 영광이며, “임금님을 위하여 일사 봉공”하자며 그러한 태도로 정신적 무장을 하는 것이 “여성의 무장”(김활란 1942, 96)이라고 주장한 행동을 해방 후 재현했던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위선자들의 행위일 수밖에 없다.

대한부인회는 1950년 봄, 각도 대표자대회를 개최하여 각도에서 벌어지는 전투지구의 상황들을 보고하며, 희생을 줄이기 위하여 부인회가 일선 장병들을 위문품으로 위안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

대한부인회서

일선에 위문품

웅진, 개(성)부, 포천 등지에서 공산군의 침입을 맞아 결전을 하고 있는 장병들의 눈물겨운 수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대한부인회에서는 이미 고초장, 수건, 실바늘, 담배, 책 등 다량의 위문품을 가지고 제일선 장병을 위문하였는데, 이번에는 제일선 장병에게서 동부인회에 고마움 뜻을 표하여 왔다 한다(조선일보 편집국 1949b, 2).

대한부인회는 정부공무원들이 주도하는 비행기 기금헌납운동에 맞춰 비행기헌납운동을 결의하게 되었다.

절미(節米)로 비행기 헌납 전남 한부(대한부인회)에서 결의

[광주] 대한부인회 전남지부에서는 지난 13일 동회회관에서 도 본부 각 부장회의를 개최하고 19일 여순사건 1주년을 계기로 하여 전남도 일원 각 부인회원들로 하여금 OO세수깎[세순가락]씩 절미운동을 전개하고 비행기 대한부인회 전남호공 헌납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다(조선일보 편집국 1949c, 1).

전남지부 대한부인회가 비행기 기금헌납운동에 앞장섰던 것은 여순사건에 대한 일종의 ‘면벌부’라는 인상을 금하기 어렵다. 그 이후로 대한부인회 서울시본부, 경기도 양주, 경기도 시흥, 마산, 목포, 충주, 소흘면, 경주 등에서도 결의했다는 신문보도가 있지만, 실제 비행기(전투기)를 구입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역사가 교차되고 있다. 1937년 일제의 전시총동원체제가 선포되자 한국의 각 지방에서는 지역명을 붙인 비행기, 폭격기를 헌납하기 위한 ‘국방헌금’이라는 미명하에 조선총독부의 반관반민단체들, 여

성희 등이 함께 나섰던 기억과 중첩된다.

이제 대한여자청년단을 살펴보도록 한다. 원래 대한부인회 별동대로 불린 ‘대한여자청년호국대’와 대한청년단(약칭, 한청) 산하 여성국으로 있던 여성 대원들이 분리되어 1949년 12월 18일 ‘대한여자청년단’(약칭, 대한여청)으로 개편되었다. 대한여청이 대한여자청년호국대로 출발했던 만큼 발족 당시 “4백여명이 훈련을 받고 방금 각지에서 조직과 훈련을 하고 있다”(동아일보 편집국 1949b, 2)며 선전되기도 했다. 1949년 8월에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이승만 정부는 상비병 3만명의 충원과 예비병 20만명을 ‘호국군’과 민보단 중에서 선택하여 한청과 합류시켰다(하유식 1997, 219). 그때 한청 여성단원을 대한여자청년호국대로 분리를 했다가 대한여자청년단으로 1949년 12월 발족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자유신문 편집국 1949). 그러나 실제 대한여청이 한청과 분리되는 데에는 한국전쟁 발발의 영향탓인지 1년여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인다. 마산에서는 1950년 1월 20일 대한여자청년단 마산시 (여청)단부가 결성(남조선민보 편집국 1950)되었고, 진주 ‘여청특별단부’는 4월 29일 개최되었다고 한다. 한국전쟁 개전으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면서 대한여자청년단이 신 발족(조선일보 편집국 1950, 2)되었는데, 여기에 이희호 여사가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희호의 회고록을 보자.

친구 김정례는 대한청년단 여성국 국장을 맡고 있었다. 서울에서부터 우리는 북한의 여맹(노동당 산하 여성연맹)을 다분히 의식했는지 여자청년단을 만들고 자 뜻을 모았다. 남자청년단[대한청년단 의미] 산하에서 여성국으로 있기보다 독립적으로 여자청년단을 만들고 싶었다. (...) 김정례, 박기순, 장옥분, 이희호 넷은 의기투합하여 별도의 여자청년단을 조직하기로 뜻을 모았다. 단장으로 김활란 이화여대 총장을 모시기로 하고 찾아갔다. 그는 여자청년단은 너희가 알아서 주도하라고 했다.

전시 중이라 단체 등록을 정훈국에 했다. 그때 (...) 모운숙을 단장 (...) 부단장 김철안, 총무국 이정희, 조직국 김정례, 선전국 박기순, 외교국 이희호 등이었다. 우리의 원래 목표는 여성운동과 문화운동이었지만, 전쟁 중이라 발동의 불이랄 수 있는 군경 원호 봉사 활동을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1년 남짓 했다(이희호 2008, 38-39).

이희호는 대한여자청년단 임원을 1년 정도 했던 것으로 회고했다. 그의

기억과 당시 신문기사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선일보』 1950년 12월 10일자 기사를 보면, “한청여청국은 (12월) 8일부로 독립하여 대한여자청년단으로 강화 신발족”(조선일보 편집국 1950, 2)하였고 1954년 12월 8일 대한여청 4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도 대한여청은 1950년 12월 8일 부산에서 발족한 것이 맞다(동아일보 편집국 1954, 2). 대한여청의 간부진을 보면 단장은 모운숙, 부단장 김철안, 총무국장 박은희, 조직국장 김채형, 교도국장 김정례, 선전국장 박기순이었다(조선일보 편집국 1950a, 2). 김정례는 해방후 조선민족청년단(약칭, 족청)에 활약했던 것(이경남 1987, 9)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희호의 회고에 따르면 김정례는 대한청년단 여성국 국장을 거쳤다고 한다. 이승만의 관민통합 정책에 따라 1948년 11월 27일, 국민회청년단, 대동청년단, 대한독립청년단, 서청, 청년조선총동맹 등이 통합되었으나, 족청은 통합을 거부하여 이승만의 족청 해산 명령에 의해 한청에 1949년 1월 통합되었다(전갑생 2008, 18-19). 족청 멤버였던 김정례도 그때 한청으로 통합되어 여성국으로 배치되었던 게 아닌가 싶다. 한편 한청 초기 조직도를 보면 총재 이승만, 단장 신성모(내무장관), 3인의 부단장과 7인의 최고지도위원, 사무국, 기획국, 선전국, 훈련국, 검찰국, 조직국, 교도국, 건설국 등으로 구성(선우기성 1973, 762-763)되어 있어서 여성국은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여청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국군 위문이었다. 특히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한부인회와 같은 여성단체나 대한여청은 간혹 군부대 방문을 하여 공연을 했다고 한다. 한 사례를 보자.

대한여청

일선위문

수도 서울을 다시 공산마수에 매끼어서는[말기어서는] 되느냐고 조금이라도 더 일선장병의 사기를 도읍고져 대한여자청년단조직국장 김채형, 교도국장 김정례, 선전국장 박기순 등 3명은 몸서 동두천 북방OO지구 최전선을 방문하여 일선장병에게 었[엿] 두가마와 ‘카라멜[카라멜]’ 한 가마니를 위문품으로 전 장병에 나누어 드리고 ‘출전용사를 보내는 노래’를 제창하여 일선장병의 사기를 도꾸었다(조선일보 편집국 1950a, 2; 진한 글씨는 글쓴이 주).

여청간부들이 반공정신으로 일선장병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부른 노래

중 하나는, 1939년 일제가 조선청년들을 전선으로 내몰 때 불러준 “우리 (일본 천황)폐하께서 명하셨노라”로 시작되는 유명한 전시가요 ‘출전용사를 보내는 노래(出征兵士を送る歌)’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당시 군대문화 속에서는 일제 군국주의 문화가 깊숙이 잔존하고 있었다. 부산에서 대한여청 창립 당시 외교국장을 역임했던 이희호 여사도 전선 위문공연을 갔던 것 같다.

〈그림 1〉 대한여자청년단과 군위문공연 기념 사진



※ 출처: 연합뉴스(2019.6.12). 원 안은 이희호 여사

이희호 회고록에 따르면 대한여청의 원래 목표는 “여성운동과 문화운동”이었으나, 전시 상황이라 대한여청은 주로 ‘군경 원호 봉사 활동’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희호는 1년 활동을 하다 그만 두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직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회고록의 문맥을 보면 “여성은 전쟁의 최대 피해자”(이희호 2008, 39)라는 얘기 속에서 한국전쟁 당시 처참했던 여성 피해상을 떠올렸던 것 같다. 다시 말해 대한여청이 자신의 뜻과 부합되지 않은 일을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대한여청은 군사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 훈련은 한청의 군사훈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청 파주군단부는 한청 여자단원 60명에게 간부급 특수훈련(동아일보 편집국 1949b, 2)을 실시했다는 기사를 통해 한청

여자단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원훈련의 주요 목적은 ‘유격대 토벌과 좌익 탄압활동’에 군·경 보조요원으로 동원하기 위해서였다(하유식 1997, 214-215).

앞에서 보듯 대한여자청년단은 지역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직화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50년 1월 하순에 결성되었다고 하는 대한여청마산단부의 활동을 보자.

대한여자청년단마산시단부에서는 시내 여자중학교에서 오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11일간 합숙여자청년강습훈련을 개최 실시할 예정으로 목하 18세부터 30세까지의 부녀의 참가신청을 19일까지 대한부인회 회관에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는데 본강습 중에는 서울서 여자배속장교 1명이 내마(來馬)하는 동시 마산지방 명사의 가정일반상식 내(乃, 과) 시국강연 등의 다채로운 강습이 있을 것이라 한다(남조선민보 1950a).

당시 대한여청 마산단부 강습훈련의 결과도 기사화되었다.

(…) 이에 대한 소감을 동단장 최봉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번 훈련은 시내 36개(1동 5명)에서 도합180명을 입소시킬 작정이었는데 입소자는 겨울 30명내외로서 심히 유감되는 바 있었는데, 이는 일제 시(時)의 **여자정신대** 혹은 **징용**이니 하는 관념으로서 울어나는 하나의 잠재의식의 폐단이다. 그러나 짧은 훈련기간에 이나마 예상이상의 성과를 견우었다. 끝으로 봉건적인 집거생활을 버서나 대한여성으로서의 자녀를 가진 일반의 시국재인식과 시대적 각성을 바라맞이 않은 바이다(남조선민보 1950b; 진한 글씨는 글쓴이 주).

위의 기사(남조선민보 1950a)에서는 대한여청 마산단부가 강습훈련을 공지하며 지원생을 모집하고 군사 훈련을 포함한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아래의 기사(남조선민보 1950b)에 따르면 모집 결과는 제목인 “예상이상의 성과 여청훈련수료”와 달리 모집 성과는 180명 예상에 지원생 30명 정도(16% 정도)로 대단히 지지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을 마산단부 단장인 최봉선은 일반 여성들이 그 훈련 모집을 일제강점기 ‘여자정신대’나 ‘징용자’ 모집으로 오해했던 것으로 주장했다. 실제로 해방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여성들의 ‘정신대에 끌려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

었을 수도 있지만, 한청이나 대한여청에 대한 일반 여성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관련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대한여청의 군사훈련 전통은 1970년대 ‘한국부인회’로도 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1978년 강원도 영월군지회 향토예비군 결성식과 군사훈련



※ 출처: 한국부인회총본부(1993, 27)

심지어 1952년경에는 상이군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는 대한여청 단원에게 상이군경과 결혼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 국방부 병무국과 사회부원외국에서는 지난 (2월) 28일 상의군경결혼장려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각 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제1차 회합을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상의군경결혼 장려와 결혼식 비용 부조에 관한 문제를 협의한 결과 결혼장려에 관하여서는 대한부인회, 여자청년단에서 각각 상의군경결혼상담소(가칭)를 설치하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기로 되었으며 (...) 여자청년단에서는 상의군경이 신분(재혼, 중혼) 관계 확인서와 성병의 유무를 밝히는[밝히는] 건강진단서의 제시를 요망하고 있다(동아일보 편집국 1952, 2).

한국전쟁기 군경 또는 반공청년단체 남성들에 의한 성폭력 문제의 일단은 김귀옥의 2004년과 2019년 발표에서 드러났다. 성폭력 사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그러한 남성에게 의한 성폭력과 결혼으로의 연속선이었다.

정부가 여청에게 상이병사와의 결혼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1952년 2

월 25일부터 부산 광복동에 상이병사를 위한 무료다방, 또는 상이군인 휴게실을 개점하도록 하여 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 또한 여기에 드러울 수 있는 사람은 상이군인만이 아니라 육해공군경관 등 전체에 걸린 군인을 환영하며 이 사업의 특색은 차가 나오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신문잡지를 손쉽게 앉아 있는 동안 볼 수 있으며 이 써-비스는 모두 (여청)단원들이 직접 하고 있다한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이며 하루 평균 200여명의 피곤한 군인들이 이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들어 쉬어간다고 한다.

모윤숙 씨 담(談)=이 사업은 국가적 보조나 어떤 후원 단체의 원조가 있어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순전히 **단원의 열성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싸워서 도란한 피곤하고 불우한 그들의 혼이 잠시나마 여기서 쉬어 안식을 얻고 즐거워나이면 고만이다. 될 수 있는 대로 고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UN군도 드려오게 하여 한국 군인과 UN군의 따뜻한 친목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럼으로서 또 하나의 새로운 공산주의와 싸우는 길이 저절로 터지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상이군인 담(談)=불구의 몸으로 돌아온 우리의 생활과 밖[바깥] 사회는 그야말로 천지의 차였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우리의 휴게소가 이 변화한 거리(부산 광복동)에 생겼다는 것은 너무나 거짓말 같은 사실이다. 다만 고맙고 눈물겨울 뿐이다. 이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얻으므로 나는 다시 싸울 용기를 얻고 싶은 것이다(경향신문 편집국 1952, 2; 진한 글씨는 글쓴이 주).

이 글만으로는 ‘다방’ 또는 ‘휴게소’가 실제 어떤 곳인지 상상하기 힘들다. 또한 그곳에서 일을 했던 여청 단원의 입장은 알 수 없다. 한국 현대 여성사에서 친일과 매국, 오욕의 상징적 인물 중 한 명인 모윤숙(정운현 2016)은 1952년 연초에 “여성에게 외친다”는 칼럼에서 전쟁에서 “남자들 혼자서만 하여 주리라 믿고 가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오늘 우리 주위엔 얼마나 여자의 따뜻한 힘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 거리에 쫓겨다니는 그 피곤해하는 상이군인을 위해 일정한 휴게소 하나 없다는 사실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 모든 욕심스런 사치심을 떠나서 무료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여성을** 나라는

부름니다. 그러지않고 이 허무러진 우리의 집과 생활내면건설을 누구에게 의탁하겠습니까? (...) 주저 방황 핑계 효과없는 **재래식 요조숙녀의 허위의 탈을 벗을때는 왔읍니다**(모운숙 1952, 3; 진한 글씨는 글쓴이 주).

당시 모운숙은 ‘용사의 집’¹¹⁾ 설치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상이군인과 여청단원의 결혼을 미화시키는 기고도 발표했다. 그러한 주장은 용사의 집 설치의 명분을 제시한 글로 보인다. ‘용사의 집’이 설치된 것은 1953년 3월 경이다. 그런데 그 기고문은 1941년 12월 8일, 경성(서울) 부민관의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강연회에서 모운숙이 발표한 “여성도 전사다”를 떠올리게 한다.

(...) 얌전하고 사양심 많고 수집어서 아름다웠든 우리의 전통이 깨어지게 되었읍니다. 이것을 깨어트리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하려는 큰일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不可 不得已 이 미덕이라고 일컫든 과거의 상아탑을 깨여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읍니다. (...) **생산은 남자가 하고 소비는 여자가 한다는 일은 한가한 평상시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나 아씨나 마님이나 양반이나 상인이나 가문 문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大日本帝國의 **평등한 국민**이면 그만입니다. 가문에서 쫓겨나드라도 나라에서 쫓겨나지안은 안해 며느리가 됩시다.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하여 공장이 비였으면 공장으로 회사가 비였으면 회사로 드려가서 일합시다. (...)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만은 애끼지 맙시다. 아들의 생명 남편의 생명 다- 밟이고나서 우리 여성마저 나오라거든 생명을 폭탄으로 바꿔 전쟁마당에 쓸모 있게 던집시다. 이제부터 행복의 노예가 되지 말고 행복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됩시다(모운숙 1942, 111-114; 진한 글씨는 글쓴이 주).

1941년 12월의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강연회에서는 김활란, 임효정, 인숙

11) ‘용사의 집(*Home of the Brave*(*Home of the Brave*, 1945))’은 태평양전쟁 당시 미 흑인병사를 주인공으로 한 아서 로렌츠(Arthur Laurents)의 희곡 작품이라고 한다. 이를 유치진이 미 공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번역극으로 공연(김옥란 2018, 147)을 했던 작품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극 ‘용사의 집’을 모운숙이 관촬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해방 직후 친미의 행보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걸었던 고위층 문학가이자, 낙랑클럽을 조직했던 모운숙으로서는 충분히 용사의 집 아이디어를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고, 군부는 이를 상이용사와 같은 군인들의 불만을 막을 위안시설로 활용했을 개연성이 있다.

재, 박순천, 허하백, 최정희 등 당대 최고 여성계 리더들이자,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로 된 여성들이 발표했다. 모운숙의 1952년 연초의 기고문에서 ‘요조숙녀의 허위의 탈’은 1941년 강연문의 취지와 정확히 부합하며, 나라를 위해 무료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라는 것은 군 ‘위안부’와 같은 수탈적 일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싶다. 모운숙의 그러한 경험과 주장은 한국 전쟁 시기 사실상의 미군 ‘위안부’의 역할을 하게 한 인텔리 여성들의 ‘낙랑클럽’(배안숙 2012)과 한국군을 위한 한국군 ‘위안부’와 한국군위안소(김귀옥 2019) 설치를 정당화시키는 정부나 군부의 주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운숙의 주장이 모든 대한부인회나 대한여자청년단 구성원들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운숙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기에 여성의 성을 내세워 여성을 동원하고, 스스로는 권력화하는 길을 찾았다. 다시 말해 모운숙은 전쟁기 여성의 위치를 병사에 대한 간병, 피 묻은 군복 세탁, 주먹밥 짓기, 병사들의 무훈과 승리를 위한 위문대 활동과 위로, 경우에 따라서는 병사들을 성적으로 ‘위안’하는 역할로 고착시켰다(배안숙 2012, 39).

대한청년단이나 대한여청의 여성단원들은 성적 착취에서 더 나가야 했다. 1948년 제주4·3이나 여수·순천사건에서 군경이나 반군청년단에 의한 국가 폭력은 대중적인 공포심을 조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청 여성대원들도 4·3 유격대 토벌이나 여순사건에 투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4·3사건과 관련된 다음 글을 보자.

(...) 특별수사대장 최난수 경감은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으로 여자들을 나체로 거꾸로 매달아놓고 고문하는 일제시대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이런 난행을 저질렀습니다. (...) 동네에서 예쁘다고 소문났던 처녀 강조순(18)은 하귀지서에 끌려와 ‘사라진 오빠를 찾아내라’며 매일 전기고문을 받다 (...) 경찰은 남녀인 대한청년단을 모두 집합시킨 후 이미 초추검이 된 그녀를 별거벗긴 후 대한청년단 여자 대원들에게 철창으로 찔러 죽이도록 했습니다. 당시 대한청년단원이었던 김계순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이 그녀에게 몸쓸 짓을 하려다가 안되니 그렇게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 (김두식 2004[2011], 127).

경찰은 그를 알몸으로 만든 뒤 “여자니까 대한청년단 여자대원들이 나서서 철창으로 찌르라”고 명령했다. 여자대원들이 기겁을 하며 망설이자 “찌르지 않으

면 너희들이 대신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몇 차례의 자살을 입고 조순은 숨을 거두었다(신다임·안치용 2020; 진한 글씨는 글쓴이 주).

두 인용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제주에서 18세 소녀가 실종된 오빠를 대신하여 대한청년단¹²⁾ 단원이 찢은 철창에 학살당했다. 그런데 그를 희생시킨 일이 바로 한청 여자대원의 손으로 자행되었다. 한국전쟁 전후 군·경이나 반공청년들에 의한 전시 성폭력은 대체로 극도의 반공주의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폭력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살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군·경이나 반공청년들에 의해 마을 단위의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최근 조사한 예로 양양 조산리나 강릉 등에 일시 체류한 군인들에 의한 부역혐의 여성들에 대한 집단 성폭력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런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진술은 없었지만, 양양군에는 미군위안소와 한국군위안소가 동시에 차려졌고, 양양군 일대에 부역혐의자 색출작업도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여성의 동원에 대해 과연 여청이나 일반 여성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일부 여청단원 중에는 적극적으로 이승만 정부나 반공주의에 대한 헌신이자 영광으로 생각했던 이가 있었을 수 있고, 당시 여성들이 정부나 여성단체 지도자의 말에 순종적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층 다수의 여청단원이나 일반 여성들이 정부를 비롯하여 대한여자청년단과 대한청년단, 또는 반공청년단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을지언정 적극적 지지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전쟁과 반공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기층 여성들에게 침묵을 가져왔다. 게다가 기층여성들에게는 자신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고통과 상처에 위로하고 연대해줄 여성단체들은 없었다. 오히려 여성들의 성착취와 폭력을 국가에 대한 충성이자 무료로라도 제공해야 할 서비스라고 말했던 모윤숙과 같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다. 심지어 기층여성의 성은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성이 아니라 국가와 전쟁에 유용한 여성의 도구였

12) 제주4·3당시 제주도민을 ‘빨갱이’ 또는 ‘폭도’로 몰아 성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파괴와 죽음으로 몰았던 대표적인 가해 주체로 악명을 떨친 단체는 ‘서북청년회’였다. 1948년 12월 19일 이후 서북청년회는 대한청년단에 편입이 되지만, 제주도민은 대한청년단과 같은 반공우익단체를 통칭하여 ‘서청’으로 명명했다(김성례 1998).

을 뿐이다.

해방 당시 좌우, 진보와 보수계통의 여성운동가들도 때로는 연대하거나, 때로는 갈등 및 대립하면서도 잠시 공존했다. 그러나 좌익계통의 여성단체를 포함한 여성계 진보세력들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불법단체로 해산당했고, 한국전쟁 과정에서 친일과 반공 세력들에 의해 완전히 명맥이 끊기게 되었다. 정부 수립 후 반관반민의 정책에 따라 대한독립촉성애국부인회를 계승한 ‘국책부인회’로서 여성계 전국 단체인 대한부인회(회장 박순천)나 대한부인회와 계속 함께 해온 대한여자청년단 등은 전후 복구 활동을 포함하여 대중적인 사업을 하면서 1950년대 후반까지도 전국적인 위상을 갖고 있었다(박인순¹³⁾ 1958, 4). 특히 대한부인회와 대한여청은 반공주의를 표방한 활동을 하면서 1960년 4·19혁명 직전까지도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아부족속들”(최은희¹⁴⁾ 1961, 4)로서 활동하며 전국적인 세를 형성해나갔다(동아일보 편집국 1960).

1960년 4·19혁명의 물결 속에서 대한부인회와 대한여자청년단은 명멸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시민, 학생, 여성들이 함께한 시위대는 자유당사와 함께 ‘국책부인회’(최은희 1961, 4)라는 위상을 가졌던 대한부인회나 대한여자청년단 등의 간판을 떼어버리거나, 유리창을 파손(조선일보 편집국 1960, 2)하기도 했다. 곧이어 자유당의 부정부패사건과 엮인 대한여청 등은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되었다. 1961년 5·16쿠데타 이후 ‘정당·사회단체·노조해체포고령’에 따라 대한부인회나 대한여청은 말단기구까지 몰락하게 되었으나 대다수의 단체들은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동결령상에 침복했다가 등록”하게 되었다. 이후 1963년 10월 ‘한국부인회’(초대회장 임영신) 창립 시, 대한부인회와 대한여자청년단이 통합(경향신문 편집국 1993, 13)되었다. 초창기 한국부인회는 대한부인회와 대한여청의 주요 간부들로 구성되었고, 대한여청의 대표적인 인물이 박금순 대한여청 총무(한국부인회 2대 회장, 재임기간 1974~1992)이다(한국부인회총본부 1993, 94). 대한부인회와 대한청년단의 사실상의 여성 활동대라 할 수 있는 대한여청은 소수의 여성활동가나

13) 박인순은 일제강점기 교원 출신으로, 해방 후 대한부인회 간부(총무부장, 서울시 본부 회장 등)를 역임했고 1958년 당시 보건사회부 부녀국장 재직중으로서 반관반민의 전형적 인물이라 할 수 있음.

14) 최은희(1904~1984) 기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일보 기자와 근우회 멤버로도 활동하였고, 해방후 대한부인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연구자들에 의해 간혹 언급될 뿐 역사의 전면에서 잊혀져갔다.¹⁵⁾

IV. 맺음말: 지연된 여성주의 성의식과 성문화

여성단체의 사전적 정의는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이며, 성평등의 관점에서 불평등한 성관계를 문제제기하고 평등한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분단이 고착되면서 남한 사회에서 여성 민중이나 노동자를 대변했던 진보 여성단체는 괴멸하게 된 반면, 보수 여성단체는 여성계를 지배했다. 보수 여성단체는 반관반민화되어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축첩제도나 공창제 폐지 방안을 제시했다. 축첩제도의 경우 엘리트층의 일부다처 문화를 문제시하는 데 주력하면서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공창제 폐지 방안의 경우, 자립의 대안 없는 공사창제 폐지로 피해여성을 가해자화하며, 사회적 배제나 성매매업으로 방치하는 데 기여하는 셈이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21세기까지 성매매와 인신매매, 성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성해방적 의식과 자립적 여성주의적 성의식의 형성을 지연시켰다.

그러한 보수 여성단체의 인식 저변에는 이원화된 성관념이 엮여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는 미군을 위시하여 급증한 군대에 의해 우후죽순처럼 확산된 군‘위안부’와 군위안소(기지촌), 사창과 혼혈아, 성병 등의 확대와 함께 암시장에 범람하는 미제 물건과 미국식 문화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었다. 정부는 이를 막을 가치를 동양의 공동체/정신으로서의 ‘전통’의 가치를 제시했다(김은경 2006, 16). 1963년 대한부인회를 뒤이은 한국부인회는 강령으로 “우리는 미풍양속을 지성에서 빛내고 사치와 안일을 박차고 근로 재건에 매진하자”며 전통을 강조했다(한국부인회총본부 1993, 96). 심지어 한글문화를 수호한 여성=전통이지만, 외래어를 사용하며 방종한 생활을 하는 ‘양갈보’=반전통으로서 군‘위안부’를 배격할 명분을 제시했다. ‘처녀의 순결성’은 ‘지켜야 할 성’이자 미풍이며 삼강오륜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인식

15) 일제강점기부터 1950년대 우익 여성단체를 전반적으로 다룬 양동숙의 박사학위논문인 “해방 후 우익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연구(1945~50)”에서 1950년에 본격적으로 설립된 대한여청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김은경 2006, 24)은 앞에서 본 정철성과 같은 진보 여성의 성의식을 배격하게 될 명분을 확보했다. 보수 여성들의 그러한 성의식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나 미군‘위안부’, 한국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역전된 인식을 발견하게 된다. 모운숙과 같은 여성엘리트에게서 전시의 성동원은 국가를 위한 여성의 역할, 때로는 의무로까지 인식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수 여성들에게는 전시 성폭력, 또는 국가폭력으로서의 성폭력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인식자체가 부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보수 여성엘리트들은 일제의 군국주의적 성의식과 성문화에 대한 비판이 결여된 상태에서, 가부장적 이원화된 성의식과 성문화를 성찰 없이 실천했다. 거기에 반공주의에 따른 ‘적과 아’를 구분하는 냉전문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자신의 진보성과 일제에 대한 부역의 경험을 지워나갔다. 분단정부 수립 이후 진보 여성계가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야 했다. 1970년대 기생관광 문제로부터 1980년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성폭력 문제, 여성노동자를 포함한 여성운동가들에 대한 기업이나 국가측의 성폭력과 성고문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1980, 90년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입장을 가진 여성단체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1990년 11월 16일에 창립되었다. 또한 1986년 문혜림과 유복남 등에 의해 설립된 ‘두레방’과, ‘기지촌활동’을 했던 여성 대학생 출신으로 김현선, 신영숙, 고미라 등이 활동하고 있는 ‘새움터’ 등이 미군‘위안부’ 인권 지원과 함께 군‘위안부’의 자립적 삶과 공동생활을 위한 근거지가 되었다. 그러한 힘이 모여서 2014년 미군‘위안부’ 출신 여성 120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하여 2022년 9월 29일 대법원에서 국가 책임과 잘못을 확정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의전화(1983년 설립), 한국성폭력상담소(1991년 개소) 등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폭력문제를 보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러한 새로운 여성단체들에 의해 성폭력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군‘위안부’나 미군‘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성의식과 성문화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었다. 분단과 전쟁에 의해 괴멸되었던 진보 여성단체나 진보적 성의식이 자리잡히는 데에 최소한 40여 년의 시간이 지체되었다. 또한 착종되고 파열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식민주의적 성의식과 자본주의적 성문화는 사회 곳곳

에 내재화되어 성평등한 성의식과 성문화를 여전히 교란시키며 성혐오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70여 년 전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지연된 여성주의의 양 날개가 21세기에 조용하며 건강하게 퍼덕거리며 날아가고 있는가?

김귀옥은 한성대 소양핵심교양학부 교수다. 구술사방법론을 통해 분단과 전쟁, 평화와 인권 관련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대표 저서: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선인, 2019),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역사비평, 2004),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밑으로부터의 월남인 연구』(서울대출판부, 1999), 『김대중의 사상과 정치: 평화·민주주의·화해·협력』(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3, 공저)

참고문헌

- 강만길. 2020. “어용단체인 애국부인회 회원들의 활동상.” 『한국사』 1. 서울: 한길사.
- 강영심. “근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9700> (최종검색일: 2023/8/30)
- 강정숙. 1998. “대한제국·일제 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 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11호, 197-237.
- 경향신문 편집국. 1947a. “미군인이 열차내서 만행 조선부녀 3명을 능욕.” 『경향신문』 (1월 11일), 2.
- 경향신문 편집국. 1947b. “부총(부총)담. 극형에 처하라. 조선여성 명예 위해 항의.” 『경향신문』(1월 11일), 2.
- 경향신문 편집국. 1948a. “일치마라 갱생의 길·속박의 사슬은 풀렸다. 찾아라 갱생의 길.” 『경향신문』(2월 8일), 2.
- 경향신문 편집국. 1948b. “사회각층의 말과 창기의 말.” 『경향신문』(2월 8일), 2.
- 경향신문 편집국. 1949. “유령 드디어 자별하다. 등록취소 130단체.” 『경향신문』 (10월 19일), 1.
- 경향신문 편집국. 1949a. “첩둔 공무원추방 정의원. 홍길동춘향전을 인레 찬부양론 끝에 수부결.” 『경향신문』(7월 22일), 2.
- 경향신문 편집국. 1950. “근민 고명자 송.” 『경향신문』(2월 8일), 2.
- 경향신문 편집국. 1952. “거리에 용사의 집 탄생.” 『경향신문』(3월 23일), 2.
- 경향신문 특별취재반. 1977a. “군정경찰[53] 여경창설.” 『경향신문』(5월 6일), 5.
- 경향신문 특별취재반. 1977b. “군정경찰[55] 여경의 활약.” 『경향신문』(5월 10일), 5.
- 경향신문 특별취재반. 1977c. “군정경찰[55] 사창가.” 『경향신문』(5월 11일), 5.
- 경향신문 편집국. 1993. “‘한국부인회 30년사’ 발간.” 『경향신문』(12월 23일), 13.
- 권기하. 2020. “독립협회 세력의 정당과 대표에 관한 논의.” 『한국근현대사연구』 제93집, 49-84.
- 김귀옥. 2004. “한반도 분단국가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과 쟁점: 구술생애사 연구를 기초로 하여.” 한국여성학회 추계학술대회(11월 20일), 서울.
- 김귀옥. 2012. “한국전쟁기 한국군에 의한 성폭력의 유형과 함의.” 『구술사연구』 제3권 2호, 7-37.

- 김귀옥. 2019.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 서울: 도서출판 선인.
- 김귀옥. 2023. “한반도 정전체제와 냉전문화.” 『한국과 국제정치』 제39권 제1호, 131-168.
- 김두식. 2004[2011]. 『헌법의 풍경』. 서울: 교양인.
- 김상숙. 2021. “한국전쟁 전후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1기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 기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31집, 61-100.
- 김상숙. 2022. “연좌제와 ‘대살(代殺)’을 중심으로 본 여성 민간인 학살과 전시 성폭력.” 『여성문화연구』 제57호, 99-125.
- 김성례. 1998.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제주4·3을 중심으로.” 『창비』 제26권 4호, 340-352.
- 김옥란. 2018. “유치진과 미국, 드라마센터와 문화냉전.” 『한국학연구』 제51집, 131-177.
- 김은경. 2006. “한국전쟁 후 재건윤리로서의 ‘전통론’과 여성.”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2호, 7-48.
- 김청강. 2021. “냉전과 열전의 경계에서 읽는 ‘여성주의 평화운동’의 역사성과 현재성 [서평] 김태우(2021),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인문논총』 제78권 3호, 435-445.
- 김태우. 2021.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서울: 창비.
- 김활란. 1942. “여성의 무장.” 『대동아』 제14권 제3호(3월 1일), 94-97.
- 김활란. 1965[1999]. 『우월 김활란 자서전: 그 빛 속의 작은 생명』.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남조선민보 편집국. 1950. “여청마산지단 결성식 성전.” 『남조선민보』(1월 22일).
- 남조선민보 편집국. 1950a. “여자청년단합숙훈련실시.” 『남조선민보』(3월 15일).
- 남조선민보 편집국. 1950b. “예상이상의 성과 여청훈련수료.” 『남조선민보』(4월 2일).
- 노지승. 2016. “젠더, 노동, 감정 그리고 정치적 각성의 순간- 여성 사회주의자 정칠성(丁七星)의 삶과 활동에 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43집, 7-20.
- 동아일보 사설. 1921. “민족자결에 대한 당국의 해석(하) 연맹주의와의 모순.” 『동아일보』(4월 21일), 1.
- 동아일보 편집국. 1921. “때의 소리.” 『동아일보』(12월 29일), 4.
- 동아일보 편집국. 1924a. “여성동우회 발기회.” 『동아일보』(5월 5일), 3.

- 동아일보 편집국. 1927. “삼월회 해체.” 『동아일보』(1월 10일), 3
- 동아일보 편집국. 1929. “여성에 대한 일체차별철폐: 근우회행동강령.” 『동아일보』(7월 25일), 3.
- 동아일보 편집국. 1932. “상고조선 자유애혼속고 10.” 『동아일보』(2월 5일), 5.
- 동아일보 편집국. 1946. “조선여자국민당 주최 제1회여자국민당대의원회 겸 전국 여성대회.” 『동아일보』(6월 1일), 2.
- 동아일보 편집국. 1946a. “중앙에는 총본부, 통일된 독촉애부 신발족.” 『동아일보』(6월 23일), 2.
- 동아일보 편집국. 1946b. “폐업공창구제연명을 결성.” 『동아일보』(8월 11일), 2.
- 동아일보 편집국. 1946c. “여성의 단결과 독립에 전국 8개 여성단체 총연맹결성.” 『동아일보』(11월 16일), 2.
- 동아일보 편집국. 1946d. “여경관 5백명 등장 우선 간부로 10명 채용.” 『동아일보』(5월 4일), 2.
- 동아일보 편집국. 1947. “민족적 모욕 금후의혹 많다. 독촉애국부인회.” 『동아일보』(1월 12일), 2.
- 동아일보 편집국. 1947a. “여성총련서 입의에 건의.” 『동아일보』(1월 7일), 3.
- 동아일보 편집국. 1948. “남북통일에 전력, 독촉개칭코 신국민운동.” 『동아일보』(12월 26일), 1.
- 동아일보 편집국. 1949a. “헬믹소장 작일 귀국.” 『동아일보』(1월 11일), 1.
- 동아일보 편집국. 1949b. “여성운동의 중추 대한여자청년단발족.” 『동아일보』(12월 18일), 2.
- 동아일보 편집국. 1952. “상이군경결혼에 낭보, 신부주선은 물론 기념품 피로 등 비용까지 제공.” 『동아일보』(3월 5일), 2.
- 동아일보 편집국. 1960. “자유당 선대위 상임위원추가.” 『동아일보』(2월 20일), 1.
- 모운숙. 1942. “여성도 전사다.” 『대동아』 제14권 제3호(3월 1일), 111-114.
- 모운숙. 1952. “여성에게 외친다.” 『경향신문』(1월 1일), 3.
- 민족문제연구소. 2009. 『친일인명사전』 1. 서울: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주의민족전선. 1946. 『조선해방연보』. 서울: 문우인쇄관.
- 박인순. 1959. “여성의 발자취.” 『조선일보』(8월 15일), 4.
- 법제처. 1947. “공창제도등폐지령” (11월 14일 제정, 1948년 2월 13일 시행). <https://www.>

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9&tabMenuId=105&query=%EA%B3%B5%EC%B0%BD%EC%A0%9C%EB%8F%84%EB%93%B1%ED%8F%90%EC%A7%80%EB%A0%B9#undefined(최종 검색일: 2023/9/29)

선우기성. 1973. 『한국청년운동사』. 서울: 금문사.

손호철. 1991. 『한국정치학의 새구상』. 서울: 풀빛.

신다임 · 안치용. 2020. “4·3’에서 진 그 많은 젊은 꽃들은…” 『르몽드디플로마티크』(10월 27일). <http://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15> (최종검색일: 2023/9/29)

안정효. 1990. 『은마는 오지 않는다』. 서울: 고려원.

양동숙. 2010a. “해방 후 우익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연구(1945~50).”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양동숙. 2010b. “해방 후 독립촉성애국부인회의 조직과 활동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62호, 375-430.

양동숙. 2010c. “대한부인회 결성과 활동 연구(1948~50).” 『한국학논총』 제34호, 1147-1192.

이경남. 1987. “청년운동반세기(37) 대한독립청년단[4] 여성에 민족사상·반공교육.” 『경향신문』(7월 22일), 9.

이태진. 2023. “세계 경제10위·민주화·산업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일보』(2월 25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3023> (최종 검색일: 2023/8/20).

이혜숙 · 강인순. 2015. 『나는 대한민국 경남여성 1945~2015』. 진주: 경상대학교 출판부.

이희호. 2008. 『이희호 자서전 동행』. 파주: 웅진지식하우스.

자유신문 편집국. 1949. “대청내 여단원 여청으로 분립.” 『자유신문』(12월 27일).

정운현. 2016. 『친일파의 한국 현대사』. 서울: 도서출판 인문서원.

정철성. 1926. “신여성이란 무엇.” 『조선일보』(1월 3일), 7.

정철성. 1947[2020]. “조선부녀에 대한 미군의 만행 사건에 대하여.”(1947. 『부인』 제2권 제2호). 고한준 편. 『신여성이란 무엇?』. 서울: 두루미출판사.

조선일보 편집국. 1924a. “신진여성을 망라한 경성여성동우발기회.” 『조선일보』(5월 29일), 3.

- 조선일보 편집국. 1924b. “여성동우발회식은 오는 23일 오후8시에 시내 턴도교당에서 거행할터인데 조선녀성동우회라고 명칭을 변경.” 『조선일보』(5월 22일), 3.
- 조선일보 편집국. 1937. “관민일체의 대도직 군사원호련맹 결성.” 『조선일보』(7월 23일), 3.
- 조선일보 편집국. 1946a. “여성원호의 총본영 군정청내에 부녀국설치.” 『조선일보』(8월 29일), 2.
- 조선일보 편집국. 1946b. “공창제존치는 「사회악」.” 『조선일보』(9월 3일), 2.
- 조선일보 편집국. 1947a. “「새살림」 발간.” 『조선일보』(1월 19일), 4.
- 조선일보 편집국. 1947b. “공창폐지와 구제.” 『조선일보』(3월 26일), 2.
- 조선일보 편집국. 1948. “국민운동건의.” 『조선일보』(11월 19일), 1.
- 조선일보 편집국. 1949. “성과파대한 전향결산-자수자 무려 5만여!” 『조선일보』(12월 2일), 2.
- 조선일보 편집국. 1949a. “청년단기능강화.” 『조선일보』(9월 4일), 1.
- 조선일보 편집국. 1949b. “대한부인회서 일선에 위문품.” 『조선일보』(6월 25일), 2.
- 조선일보 편집국. 1949c. “절미로 비행기헌납 전남 한부에서 결의.” 『조선일보』(10월 21일), 2.
- 조선일보 편집국. 1950. “‘대한여청’신발족 단장에 모운숙여사.” 『조선일보』(12월 10일), 2.
- 조선일보 편집국. 1950a. “대한여청.” 『조선일보』(12월 30일), 2.
- 조선일보 편집국. 1956. “부인시평부인회 총회에 즈음하여(상).” 『조선일보』(9월 26일), 4.
- 조선일보 편집국. 1960. “서울향해 묵념하고 해산.” 『조선일보』(4월 25일), 2.
- 조선희. 2017. 『세 여자』(1, 2). 서울: 한겨레출판.
- 최은희. 1961. “61년의 여성계 잘한것 · 못한것.” 『조선일보』(12월 29일), 4.
- 조영숙. 2021. “해방 후 여성신문 연구 : 『부인신보』(1947년-1950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정순. 2015. 『박순천 연구』. 서울: 백산서당.
- 하유식. 1997. “이승만 정권 초기 정치기반 연구-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제3호, 203-241.

현동립. 1946. “공창폐지에 앞서.” 『경향신문』(11월 16일), 2.

한국부인회총본부. 1993. 『한국부인회 30년사』. 서울: 한국부인회총본부.

World Economic Forum. 2023. *Global Gender Gap Report 2023*. Geneva: World Economic Forum.

Abstract

Korean Women's Movement Whose Wing Was Broken by the Division and the War: The Domination of Conservative Women Groups and the Delayed Feminist Sexual Consciousness

Kim Gwi-ok*

In this article, I investigate how women in various spectrums between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sides in South Korean society disappeared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and how the results appeared. Specifically, I first examine the gender consciousnesses and practices of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women during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and, as an example, the women's responses to the abolition of licensed prostitution and the concubine. Next, I explore the roles and activities of the women of Daehan Buinhwe(Korean Women's Association) and Daehan Yoja Cheongnyondan (Korean Women's Youth Corps), which became half-official and half-civilia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divisional government. They used other civilian women as sexual tools, had military training, or acted as subjects of sexual violence without a sense of gender equality. As a result, feminist sexual consciousness and sexual culture were distorted or delayed in Korean society. In other words, Korean women's organizations, which were half-official and half-civili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supported the Japanese emperor and the sexual mobilizations in wartime. In that way, half-official and half-civilian Korean women's organizations during the Korean War also resulted in delaying feminism by assisting wartime sexual violences.

Key words: Korean War, half-official and half-civilian Women Organization, Delayed Feminist Sexual Consciousness, Daehan Buinhwe (Korean Women's Association), Daehan Yoja Cheongnyondan (Korean Women's Youth Corps)

논문투고일: 2023. 10. 25.

논문심사일: 2023. 11. 14.

게재확정일: 2023. 11. 23.

* Professor, Faculty of Refinement & Core Liberal Arts, Hansung University. freeox@hansung.ac.kr